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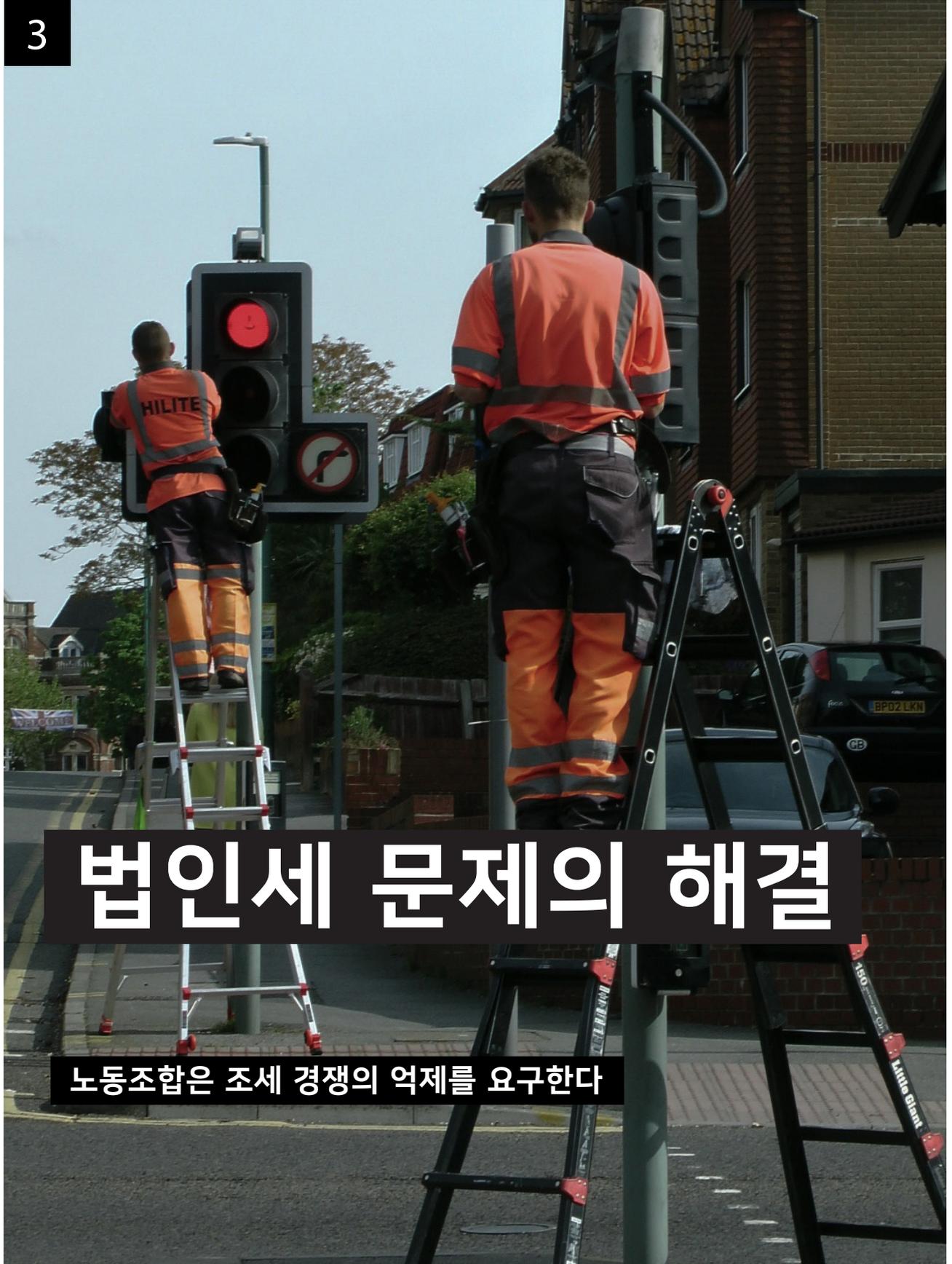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3

KOREAN

현안 보고서 3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조세 경쟁의 억제를 요구한다

조세 경쟁의 억제

해결 과제: 기업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값비싼 지원

핵심 사항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1. 법인세율을 추가 감면하지 않는다
2.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억제한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학교와 병원 등
의 공공 서비스에 쓰일 수 있었을
국고 세입의 포기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
르면서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과 세제 혜
택을 제공한다. 너무나 빈번하게도 이
러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었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값비싼 보조금에 불
과할 뿐이다.

1980년대 이후 기업 이윤에 적용되는
세율은 전세계적으로 하락해왔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투자를 촉진
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기업 로비스트들은 이러한 믿음을 활발
하게 선전했다. 하지만 한 국가가 세율
을 낮출 때 흔히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
라간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율을 둘러
싼 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노동자들의 임
금 하락과 노동조건 악화를 바탕으로 한
경쟁과 다르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 세율이 하락한 것과 동시
에 기업의 이윤은 증가했다. 컨설팅 회
사인 맥킨지사는 2015년 기업들의 순
이윤이 1980년 이후 5배 늘어났다고
추산한 바 있다

**“법인세를 둘러싼 바닥으로의 경주를 지속함으로써
정부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책임에서 달아나 다음 세계
위기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웨인 스완 Wayne S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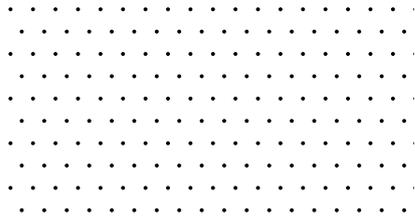
ICRICT 커미셔너,

전직 호주 재무부 장관

정부는 두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기업의 세금 고지 금액을 낮출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법인 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세율을 인하한다. 1980년대 이후 세율은 40~50%에서 30% 미만으로 급격하게 하락해왔다. 최근 몇 년간 경제의 일부로서 기업의 이윤은 성장했지만 세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에 단행된 이러한 종류의 결정 중 가장 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이었다. 이 조치로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년간 국가 부채 및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세율 인하와 더불어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는 희망 속에서 특정 경제 부문이나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좋아하는데 이는 이러한 혜택이 노동자의 역량을 육성하거나 공공 인프라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손쉬운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들이 느끼는 또다른 매력은 보조금과 달리 세제 혜택은 공적 자금을 미리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세금을 덜 걷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상 세제 혜택은 국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가장 교활하고 값비싼 방식 중 하나일 수 있다. 세제 혜택의 경제적 손해가 공적 자금의 포기라는 비용을 치를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미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거나 세제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 나라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번역 추가할 것!)



세제 혜택은 종종 복잡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패와 기업 로비스트에 의한 정치의 포섭에 취약하다. 세제 혜택이 종종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지역의 중소기업들보다 외국의 대형 회사들이 보다 유리한 조세 대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국가나 지역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능숙하게 값비싼 세제 혜택을 얻어낸다. 아마존사는 미국 전역의 도시들이 아마존의 새 본사 유치를 놓고 경쟁하도록 만들어 2018년 말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미 아마존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회사 중 하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유인책에는 15년간의 세금 면제, 재산세 100% 감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직접 실어나를 수송관을 설치하는 “아마존 대학”의 설립 등이 포함되었다. 많은 도시들은 입찰 사실을 비밀에 부쳤으며 세금을 비롯해 제시된 우대책에 대한 정보는 삭제되었다.

결국 아마존사는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세제 혜택을 약속받은 후에 뉴욕시와 워싱턴 DC의 한 근교를 낙점했다. 이 곳은 명백한 국가 중심지로 아마존사는 이러한 경쟁이 없었더라도 어떻게든 이 곳으로 본사를 옮겼을 것이다.

아마존사가 지역사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믿는 뉴욕의 지역 활동가들이 펼친 전례없는 캠페인 이후 회사는 도시에서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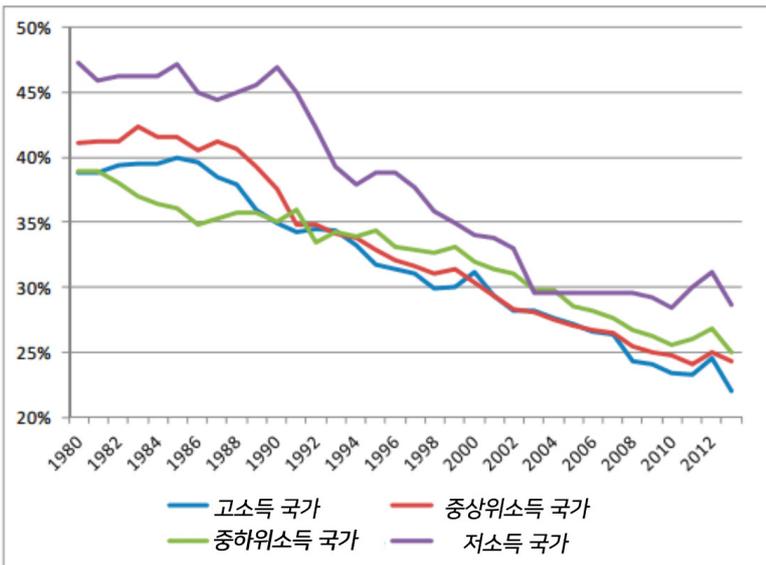
유럽 국가들 또한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조세 판정이 포함되며 아일랜드가 내린 판정은 악명높은 것으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애플사는 세율이 엄청나게 낮은 나라로 자신의 이윤을 이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특허 박스” 세제 혜택이 유럽 전역에 걸쳐 유행한 바 있다. 이미 자체의 세제 혜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이러한 유형의 세제 혜택으로 혁신과 연구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많은 소유 기술 또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의 이윤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 뿐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 투자자에게 최장 10년의 면세 기간을 제공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면세 기간이 끝날 때 일부 투자자들은 그냥 철수해 버리며 일부는 장기 연장을 얻기 위해 철수를 위협한다. 또다른 다른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 새로운 국가로 (공장이나 호텔 등의) 자산을 이전하기도 한다.

법인세율은 198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하락했다

그림 2. 기업 소득세율, 1980~2013



출처: IMF



노동조합 활동 사례

맥도날드: 언해피 노동자, 언해피 세금 음모

맥도날드는 노동자들을 혹사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최근 노조는 맥도날드의 의심스러운 조세 관행을 밝히는 데도 일조했다. 이것은 세계 노조의 역량을 키우고 회사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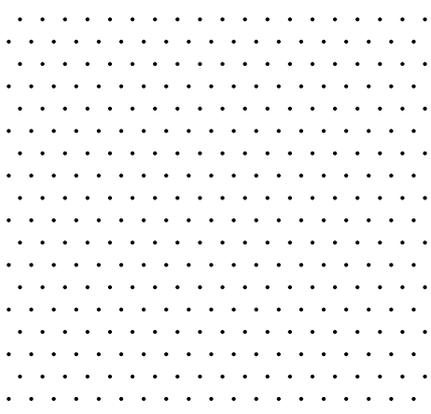
2009년 맥도날드(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부문 사용자)는 "지적 재산"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룩셈부르크에 설립하고 회사 계좌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보내기 시작했다. 맥도날드의 자회사가 설립된 룩셈부르크의 실효세율은 2009년과 2015년 사이 1.7%에 불과했다.

한편 2012년 미국의 노조운동은 <15달러를 위한 싸움>을 개시했다. 이것은 맥도날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합당한 급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이었다. 일년 사이에 전국 100개의 도시에서 파업이 진행되었다. 나쁜 관행은 단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세계적 사용자로서 맥도날드는 브라질에서는 노동법과 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아시아에서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국에서는 0시간 계약제 사용을 "선도한" 것으로 고발되었다.

<15달러를 위한 싸움>의 핵심 노조였던 국제서비스노동조합 SEIU는 패스트푸드 거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미국의 노동자 쟁점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다른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거의 동시에 연구자들은 맥도날드가 유럽에서 대규모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SEIU는 PSI 및 EPSU와의 연계를 활용해 브뤼셀에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들 노조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연구](#)는 두 번에 걸친 조세 판정에 관한 유럽의회 특별위원회 청문회 및 룩셈부르크에서의 맥도날드 조세 관행에 대한 DG COMP(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 조사 기관)의 공식 조사 착수로 이어졌다.

<15달러를 위한 싸움>은 주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 임금 15달러를 공약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입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SI/EPSU의 보고서 [<언해피밀>Unhappy Meal](#)과 [<황금을 낚는 속임수>Golden Dodges](#)를 참조하라.



조세조약

또다른 문제 영역은 쌍방 조세조약이다. 이들 조약 중 3,000개 이상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과세할 권리를 사업장 소재 국가와 사업 수행 국가(“원천” 국가)에 분할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은 종종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개발도상국이 귀중한 과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조약은 또한 기업의 이윤을 보다 수월하게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기업에 대한 모든 세제 혜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일부의 경우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낙후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인하거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신생 산업 투자의 물꼬를 틀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엄정하게 통제됨으로써 공적 자금이 투자자와 기업 임원을 위한 거대한 보조금이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세제 혜택을 비롯한 어떠한 우대책이든 그것은 전적으로 투명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정부는 약속한 경제 사회적 혜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세제 혜택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모든 유자격 회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정부 재량에 따라 특정 회사에 제공되는 혜택이다. 재량에 의해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기업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정당 재정을 후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정치를 포섭할 유인을 낳는다. 재량에 의한 세제 혜택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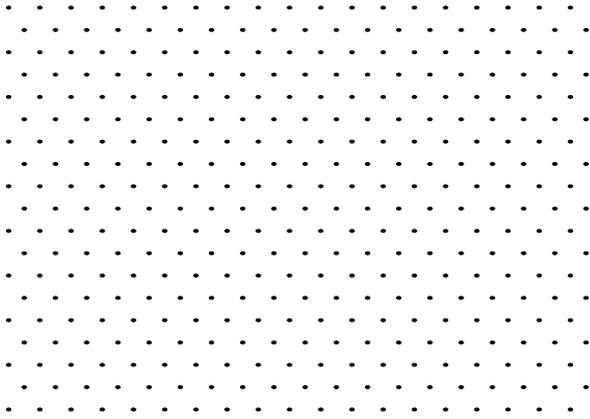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쌍방 조세조약 중 많은 경우는 공정한 몫의 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들에 의해 이용된다.



지금까지의 경과

법인세율 인하를 억제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국제적 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빼냄으로써 타 정부의 세입에 피해를 주는 효과를 가질 때조차 그것은 해당 정부의 주권 문제로 취급된다. “유해한 세금 관행”을 억제하려는 OECD와 유럽연합의 노력은 있었다. 이러한 관행에는 조세피난처로의 이윤 이전을 촉진하는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특정한 유형의 세제 혜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저 그것을 철회한 다음 새로운 유형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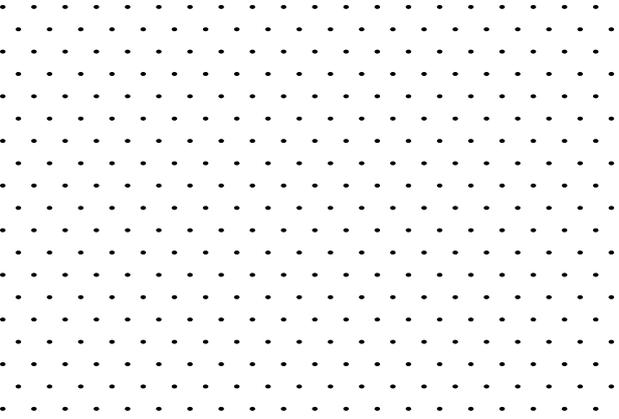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2019년 중반 OECD에서 만난 정부들은 전세계에 적용되는 최저 실효세율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했다. 이것이 모든 국가의 법인세율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국가나 (조세피난처 등의) 관할지역에서 이 수준에 미달하여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국가가 해당 기업의 납부 세액을 “추가로 채울”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커다란 진전이다. 아주 최근까지도 OECD는 비과세를 그 자체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 또한 존재한다. 최저 세율이 너무 협소한 기업 활동 기반에 적용될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최저 세율이 너무 낮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계의 세율이 실제로 이러한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율이 적어도 많은 국가의 현 세율에 가까운 25%가 되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율에 대한 조치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면세 기간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특허 박스” 세제 혜택 등 이윤에 대한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그러한 지원이 별 필요 없는 부유한 기업들에 대한 공적 보조금이다. 그러한 세제 혜택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야 한다. 보존된 세입은 사회에 혜택을 주며 공공 보건의로, 학교, 인프라, 연구 및 개발 등의 투자 환경 역시 개선하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보다 잘 활용될 것이다. 다른 유형의 세제 혜택은 제한되는 동시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종종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경우 투자가 이웃 국가로 이동할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들은 세금 우대책을 표준화하고 조세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국제 조세 규칙에 대해 동일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조세 경쟁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1. 세금 감면과 세제 혜택은 학교와 병원 등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에 쓰일 국고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세 경쟁으로 인한 보상은 주로 남성들로 구성되는 부유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공공 서비스 이용자들은 손해를 입는다.
3. 세제 혜택은 쉽게 로비와 부패로 이어지며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었을 기업의 투자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4. 국가들 사이의 조세 경쟁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경쟁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나머지를 희생시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
5. 낙후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세제 혜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남용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다.



**“나는 60년간 투자자들과 일해왔다.
그런데 아직도 잠재적 수익에 부과될
세율 때문에 분별 있는 투자를 피하는
사람들을 봐야 한다.”**

워렌 버핏, 억만장자 투자자

무엇을 할 것인가

1. 노동조합은 기업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여타 국가들과 적어도 25%의 최저 실효세율에 합의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투자한 국가에서 25% 이상의 세율로 이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본국은 해당 이윤에 대해 다시 과세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로 의미한다.
2. 재량에 의한 모든 세제 혜택, 즉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모든 유자격 회사에 동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정치인의 재량에 따라 특정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부패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3. 이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면세 기간, “특허 박스” 세제 혜택, 실질적으로 위장된 형태의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조세 판정,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이윤이 낮은 과세 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주 회사로 보내질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제도의 폐지가 포함된다.
4. 실투자비용을 덜어주는 세제 혜택은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혜택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법자에 의해 신중하게 조사되고 공중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조세 지출(세금 우대 비용)은 예산 보고서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공중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정보에 입각한 공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술되어야 하며 각 세제 혜택과 관련 조건의 세입 비용 추계를 포함하여 회사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5. 쌍방 조세조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 기업 소득 유출에 과세할 국가의 권리를 폐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6. 세금 우대책을 제공하기 전 정부는 공적 비용편익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포기된 세입을 개괄하고 주장된 혜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반복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 사례

칠레: 퇴행적 조세 개혁에 반대하는 연합의 구축

중남미 정부들은 다국적 회사들의 불법 활동 및 정부가 선물한 세금 혜택을 통해 상당한 재정 자원을 상실한다. 중남미의 퇴행적 조세 제도에는 재산, 기업, 배당금에 대한 OECD 평균 대비 낮은 세율이 포함된다.

2018년 칠레 대통령은 자유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의제 채택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조세 현대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내부세무감사 자연합(AFICH)에 의해 칠레 조세 제도의 진보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지지되었던 최근의 개혁들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퇴행적 조세안에 반대하기 위해 칠레의 노동조합들은 정치가들을 교육하고 “**고양이를 토끼라 믿지 마라** Que no te pasen gato por liebre” 캠페인을 통해 대중적 압력을 구축했다. 주요 목표는 세금 논쟁을 대중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술적 문제 이상의 것인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이 캠페인은 단지 조세 행정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양질의 공공 서비스와도 관련된다는 점이다.

칠레의 노조운동은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소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법인세

감면, 세제 혜택, 조세 행정 잠식을 통해) 부자들과 다국적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 윤곽을 제시했다.

캠페인은 제안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공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짧은 해설 영상, 길거리 게시판, 라디오 신문 TV와의 인터뷰 등을 생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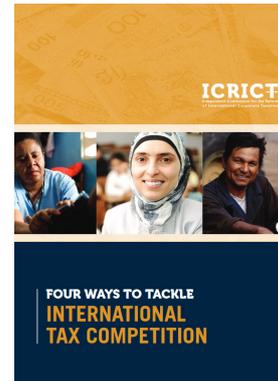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세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는 50%에서 30%로 떨어졌다. 캠페인은 정부의 제안을 18개월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 의회는 캠페인 지도부를 초청해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그들은 또한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쳐 제안 문구의 중요한 수정을 강제했다.

더 알아보기

국제 기업과세 개혁을 위한 독립 위원회 (ICRICT) — 보고서

“국제 조세 경쟁 해결의 네 가지 방식”

<https://www.icrict.com/icrict-documents-four-ways-to-tackl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고장중 STILL BROKEN - G20 조세 개혁 옥스팜 + PSI — 보고서

PSI, 옥스팜을 비롯한 선도적 조직들이 2015 G20 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로 기능을 멈춘 국제 조세 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개괄하고 있다.

<http://www.psishort.link/stillbroke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